

버거운 FTA산맥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협회 지도부 과장 _ 한 지 태

지난 4월 2일 한미FTA 타결소식은 국내언론 뿐만 아니라 유럽 로이터 통신, 중국 신화통신을 비롯한 국외 언론에서도 발 빠르게 타전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FTA 체결로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된 양 국내언론이 칭찬일색으로 자화자찬하기 바쁜 와중에 국외 진보언론들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와 여건을 가진 스위스가 포기한 미국과의 FTA를 한국이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더 의아하게 다뤘다는 것이 후문이다.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GDP, GNI

등 거시경제지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민들이 힘들게 번 소득들은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국외로 유출 되어 오히려 멕시코 경제가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제1의 주식인 옥수수시장마저 미국의 메이저곡물업체에 의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멕시코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과의 FTA는 농업포기는 물론 경제전반을 두고 보더라도 장밋빛 전망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임을 반증하는 예일 것이다.

한미 FTA 낙농육우 피해 과소평가

한미 FTA 타결 이후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 피해분석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피해를 왜곡, 축소하는 경향으로 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으며 낙농육우부문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다. 한미 FTA 협상결과 분유를 고율관세라는 명분만을 얻었을 뿐 TRQ 물량 과다설정과 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이 없고, 특히 수입쇠고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산업에 대한 피해가 간과되었다는



것이 협회 및 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제품시장이 개방된 마당에 기존 수입물량을 미국산이 대체해서 그 영향은 미비하다고 분석하는 등 우리의 분석과는 동떨어진 입장이다.

특히 TRQ물량 설정 문제는 향후 EU, 호주 등 낙농강국과의 FTA 체결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한·EU FTA 협상에서도 EU 측의 주장에 의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TRQ 운용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국영무역 포기, 수입부과금(mark-up) 예외, 생산자 단체 배분 금지, 물량 배분시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것, 가공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분하지 말것 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TRQ 운용에 따른 국내 수급불균형 최소화 장치마저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앞문은 잠고 뒷문은 활짝 열어둔 형국이다.

한미 FTA 대책 땀질식 처방은 안 된다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한미 FTA 대책을 살펴보면, UR협상 타결 때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땀질식 처방에 그쳐 씹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농업 경쟁력을 운운하면서 수출산업 육성, 고령농 등 농업 구조조정 문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농업이 경쟁력이 있기에 육성하는 나라는 없으며, 실례로 스위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소수의 낙농가들이 종사하고 있는 치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소득의 약 70%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낙농육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낙농정책의 비전과 철학에서 비롯된 낙농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일 것이다. 이에 협회가 정부에 제시한



대책방안으로는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낙농유제품에 대한 관세체제 세분화,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및 우유표기 개선 등 우유소비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육우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서는 육우전문브랜드 및 유통망 구축, 품질고급화장려금 재개 및 보완,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 등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롭고 힘든 한EU FTA 대응활동

한미 FTA 타결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난 5월 낙농선진국인 한EU FTA 협상개시라는 암담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EU는 낙농부문에서 전세계 우유생산량의 23.4%를 차지하고 있고, 낙농품, 양돈을 비롯한 축산물이 주요 수출 관



심품목임을 협상과정에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430억 유로라는 막대한 농업보조금과 특히 낙농품의 경우 전체 수출보조금(수출환급금)중의 약 48%인 연간 15억 유로(한화 약 1조 8천억 원)를 국제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EU와의 경쟁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EU측이 탈지분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낙농품과 육류 등 잉여농산물에 대해 강력한 수출보조정책을 실시하면서 불공정무역을 자행하고 있음을 정부에 지적하면서,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철폐 없이는 단 1%의 관세철폐도 없다는 것을 수차례 전달하고 협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3차 협상에 우리협회와 양돈협회 주축으로 벨기에 원정투쟁을 실시 한 바 있다. 원정투쟁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몇몇 피해품목의 단체들만의 외로운 투쟁이었다는 점이다. 한미FTA 타결이후 일부 농민조직들이 실리를 찾아 이탈하였고, 이는 품목 이기주의의 형태로 변해 갔다. 그러나 그 실리 역시 정부의 경제논리와 '눈가리고 아웅식'의 무의미한 대책으로 인해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EU FTA 대응활동은 여타 농민단체의 단합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낙농

과 양돈만이 막아야 하는 힘겨운 싸움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EU와의 FTA는 우리 낙농산업에 있어서는 마지막 카운터펀치와 같은 것으로써 끝까지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사실 한미 FTA와 한EU FTA 대응과정에서 협회가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는 방법론을 바라보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투쟁과 실리 두가지 측면에서 실리를 앞세운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때로는 투쟁이 필요하고, 때로는 실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FTA 쓰나미로 빚어진 낙농육우산업의 일대 충격은 아직 실리를 따지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대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7,800호 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 낙농육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제2의 식량으로서 우리산업을 가지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EU가 약 85%의 국민 지지로 강력한 농업보조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또한 낙농산업을 단순히 먹거리 제공산업 차원을 넘어서 경관보전, 농촌관광 등 농촌과 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낙농정책의 국가비전을 비롯한 낙농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철학을 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산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그 중심에 협회가 서서 올곧은 방향으로 가고, 진정한 낙농주권을 우리 낙농가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